

미래대응기금에는 추가세수를 통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

< 보도내용 >

- 2026.9.14.(월) 조선일보 「[단독]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‘간판갈이’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내년에 신설되는 162조3000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3분의 1가량이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부진·이월·불용 등이 확인”됐고,
 - “기존 일반·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차세대발사체개발 등 그동안 국회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업을 비롯해 저조한 집행률·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드러난 사업이 총 16개, 12조9961억원”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- 미래대응기금에는 잠재성장을 제고 및 성장 과실의 세대·지역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. 기사에서 인용된 집행률은 아직 집행 중인 사업 또는 과거의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회계연도 중 특정 시점(예: 7월 기준)의 집행률은 사업별 집행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, 제도 개선 등을 통해 '27년에는 집행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- 또한 '23, 24년 평가 결과가 미흡하더라도,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기사에서 지적된 10개 사업에 대한 반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(아동기본수당) 최근의 저출생 반등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 등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. 또한 내년부터는 연령·출생신고 정보 등으로 자격을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는 등 집행 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.
- ② (국민성장펀드) 미래 전략산업분야 ‘메가 프로젝트’를 중심으로 장기간·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로, 당초 국민들과 금융시장에 공표한 대로 5년(‘26~’30년)간 5조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.
- ③ (창업사업화지원) 창업사업화지원은 모두의 창업, 창업패키지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창업진흥원 기관운영경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, ’25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.
- ④ 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 AI전환 가속화,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에 대응하여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직접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, 청년 고용회복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, 고용 여건을 감안한 지급액 인상 등 제도 개선*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.

*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지원 대상 확대 + 지방·인구감소지역 중심 지급액 대폭 인상

- ⑤ (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) 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등에 대응하여 청년이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, '27년에는 K-뉴딜아카데미* 신규 반영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**하였습니다. 지역별 운영편차, 취업연계를 지적에 대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원센터 및 체류지원비를 신설('24)하고,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취업인센티브를 신설('24)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
*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 제공(4,895억원 5만명)

** ('26) 2,848억원 → ('27안) 8,255억원 (+189.9%)

- ⑥ (청년문화예술패스) 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와 예술인의 새로운 창작·공연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확대·반영하였습니다. 청년층의 패스 이용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외에 추가적인 문화소비를 유발*하여 문화예술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·전시·도서·영화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여, 집행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

* 패스 사용 시 추가 결제액이 지원금의 41.1% 수준(문화예술위, '25년 패스사용 분석)

- ⑦ (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)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지역에 대한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S 설치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. 동 사업은 '2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선정 등 행정절차의 소폭 지연이 있으나, 연내 선금 지급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.

* 1차 사업공고(3~5월), 사업자선정(7월), 사업자 계약협의(~9월), 2차 공고(9월), 선금지급(11~12월)

- ⑧ (바이오·의료기술 개발) 전체 과제(약 450개) 중 일부 사업에서 사업 지연, 사후관리 미흡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, 사업 전반은 높은 집행률*로 정상 추진 중이며, '27년에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, 첨단바이오·신약개발·뇌과학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.

* 최근 4년간('22~'25) 평균 실집행률: 99.9%, '26.6월 실집행률 96.8%

- ⑨ (차세대발사체개발*) 체계종합기업 선정 지연(~'24.5) 및 '일회성'→'재사용' 발사체로 사업계획 변경('25.12) 과정에서 초기집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. 다만 시스템설계 완료('26.3) 이후 '27년부터, 발사체(체계·구조·엔진·전자탑재 등) 상세설계·제작, 기반시설(발사대·메탄엔진 시험설비 등) 구축 및 토목공사 착수 등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, 필요소요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.

* 총사업기간 '23~'32년, 총사업비 22,921억원, 자주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를 위한 재사용 운용 가능한 차세대발사체(KSLV-Ⅲ) 개발 및 발사(3회)

- ⑩ (청년월세지원)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 요건 완화(기준중위소득 60%→100%) 등 대상을 확대해 반영하였습니다. 과거 평가 미흡은 사업 초기에 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급일정 연기 및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에 기인한 것이고, 이후 집행률도 '22년 14.2%에서 '25년 84.3%로 점차 개선되었습니다.

- 정부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각 사업별 반영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, 예산이 확정될 경우 각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10) 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진민규 (044-214-2910) 사무관 이상희 (leet88@korea.kr)
	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건민 (044-214-2370) 사무관 권준수 (junsu195@korea.kr)
	산업중소벤처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정희철 (044-214-2730) 사무관 한현철 (hanhc@korea.kr)
	고용노동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정 원 (044-214-2410) 사무관 정찬구 (jck0123@korea.kr)
	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의영 (044-214-2570) 서기관 김기문 (krrard419@korea.kr)
	문화관광체육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박성주 (044-214-2550) 사무관 박성현 (esther father@korea.kr)
	과학기술혁신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전보람 (044-214-2770) 사무관 최현희 (hyunkb940@korea.kr)
	국토교통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박현창 (044-214-2710) 사무관 김준성 (jsjohn@korea.kr)